

北核 暗雲...경제 위기 극복의 정책 능력 절실

- 주택건설및 SOC 활성화대책적극추진필요, 성장통해경제규모키워야-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터져 나온 '북핵'의 충격은 말 그대로 업친 데 업친 격이다.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북핵 충격은 일단 잠복상태를 맞게 됐으나 우리 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만큼 커진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북한의 핵개발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핵무기 보유에 대한 추측과 핵보유가 확인된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한반도가 핵의 영향권에 놓여 있다는 사실, 핵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 최악의 경우 핵문제가 어디로 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서북한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 경제를 괴롭히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관점에서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은 외자 유출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본시장이 있어서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금년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주식시장의 외자 비중은 40%에 이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정이지만 국내 자본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경우 대공황과 같은 재앙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핵 사태가 터지면 정부는 물론 전문가들이 외자 유출을 가장 우려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다행히 국내 주식시장은 핵 충격을 잘 버텨내고 있다. 핵 실험 소식이 전해진 직후 주가가 급락했으나 며칠 만에

회복세를 보인 데 이어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는 거의 정상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식시장이 이처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핵 소식이 전해지자 투매에 나섰던 개인 투자자들과는 달리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성숙된 태도 덕분이라 할 수 있다. 또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즉각 한국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지 않은 것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엮힌 데 뉘친 북핵 충격

그렇다고 자본시장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걸쳐 북핵 충격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북핵 사태가 외국 자본과 자본시장, 그리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북핵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자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별다른 마찰 없이 북한의 핵이 제거된다면 더 이상 심각한 경제적 충격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북핵 문제가 순탄하게 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

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한 속셈은 핵을 순순히 내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장 국제 금융제재에 따른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핵확산금지 조약의 가입과 탈퇴, 유엔 핵감시단의 추방, 6자 회담의 일방적 중단 등 핵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이 6자 회담을 통해 핵 문제를 순리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또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추가 핵 실험을 비롯해 비량 끝 전술을 강행할 경우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제재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이는 북한의 반발로 이어져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북핵 사태가 일과성 충격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악재로 보아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더구나 경제 사정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 더 많은 실정이다.

올 들어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떨어지는 가운데 경상수지도 악화되고 있다.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소비와 투자 부진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 경제는 5% 안팎의 실질 성

2007년 경제 전망

구 분	GDP(%)		경상수지(억 달러)	
	2006	2007	2006	2007
한국개발연구원(KDI)	5.1	4.3	40	-
삼성경제연구소	4.8	4.3	15	-45
LG 경제연구원	4.7	4% 초반	22	-
현대경제연구원	4.5	4% 초반	10	-
한국경제연구원	4.7	4.1	20	-22
IMF	5.0	4.3	-	-

장을 보이고 경상수지도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는 성장률이 4% 초반으로 떨어지고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은 북핵충격을 감안하지 않고도 4.3%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민간 연구소와 외국의 예측 기관들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전망은 북핵충격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북핵 사태가 악화될 경우 경제적 충격도 그만큼 커지게 될 것이다. 만약 북핵 문제가 악화될 경우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은 1%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북핵 변수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내년 경제 전망이 어두운 것은 몇 년째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투자와 소비 부진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우선 성장세 둔화로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고 있는데다 교역조건 악화도 실질소득이 늘지 않고 있어 소비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집값 급등세가 지속됨에 따라 너도나도 빚을 내 경쟁적으로 주택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 부채는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 6월 말 현재 600조원을 넘어섰다.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줄어들면서 마땅히 돈을 굴릴 데가 없는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가계 대출에 나서고 있는 것도 가계 부채의 급증에 한몫하고 있다. 이렇게 가계 부채 규모가 커지면 금융 비용 부담이 늘어나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만약 주택 가격이 급락하거나 소득 중대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가계 부채는 금융 부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가계별 금융 불안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의 일단 부동산 대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정책 불신이 깊어지고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고조되고 있어 주택

가격이 안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이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이 해결되지 않는 한 국내 소비가 회복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리발에서 있는 한국 경제

부유층의 해외 소비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도 국내 소비를 위축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환율이 떨어지는 가운데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소비 수요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국내 서비스 산업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고 경쟁력이 없는 것도 소비 수요를 해외로 내모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앞세우고 중국, 동남아 등이 경쟁 상대로 부상하면서 제주도도 비롯한 우리나라 관광 산업은 갈수록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들의 투자 부진 현상도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도권 규제와 출자총액 제한 제도 등과 같은 투자 걸림돌이 제거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높은 인건비와 노사 갈등의 증폭 등으로 투자 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의 임금 수준은 일본, 미국 등 선진국 수준과 맞먹을 정도의 고임금 국가가 됐다. 더구나 노동계 내부에서조차 반성론이 제기될 정도로 적대적이고 투쟁적인 노동 운동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물론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노사 갈등을 꼽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노사 관계는 투자를 가로막는 최대 장애 요인으로 지적된다. 게다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높고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부동산 투기 바람으로 땅값이 치솟고 있는 것도 투자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인건비, 땅값을 비롯한 생산 요소가 가격 대비 싼데다 각종 규제와 정책 불확실성까지 겹쳐 있는 곳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감소하고 국내 기업들도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열악한 국내 투자 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 결과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굴지의 국내 대기업들의 경우 국내에서 창출한 일자리보다 해외에서 창출한 일자리가 훨씬 많을 정도로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한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는 최대 걸림돌이다. 철강, 전자, 정보, 조선, 화학 등 주력 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데 이를 따돌릴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지 못할 경우 추월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정부와 대기업들 중심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연구 개발 단계에 머물고 있어 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하고 더구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실체를 드러내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록 미래 성장 기술의 개발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투자 환경에서는 기업들이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 몇 년간 소비와 투자 부진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4~5% 정도의 실질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거의 전적으로 수출 덕분이다. 환율 하락과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출이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지속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출 호조는 200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호황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경제가 강한 경기 회복을 보인 가운데 중국을 비롯한 BRICs 국가들의 고도 성장이 지속되면서 지난 몇 년간 세계 경제는 전례 없는 호기기를 구가했다. 자동차, 철강, 조선, 반도체, 휴대폰을 비롯한 주력 상품들이 세계 경기 상승세를 타고 높은 수출 증가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내년에는 사정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우선올들어심화되고있는 환율 하락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현재 달러당 960원선인 환율은 미국의 금리 인상 중단으로 저달러 기조가 지속될 경우 900원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전망되고있다. 엔화에대한원화의급격한 절상은 더 심각한 문제다.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이미 800원선까지 떨어져 일본제품과경쟁또는경합관계에있는많은 상품이세계시장에서 고전하고있다.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와 경상수지 흑자에 기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급격한 환율 하락이지속될경우 과거와같은높은 수출 증가세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기업들의경우이미채산성이나빠지고있는것으로조사되고있는가운데, 특히많은중소기업들이한계상황에몰리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위기 극복 위한 정책 능력 절실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국내 소비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이 선결 과제이다.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의급등세가 지속되는한주택과부동산구입을위한가계부채는더욱늘어나게돼소비여력이위축될 수밖에없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들어 주택 및 부동산시장 안정에 정책의 우선을 두고 보유세 인상, 실거래가 도입, 신도시 건설 등많은정책을 내놓았지만부동산가격은갈수록치솟고있다, 정책이시장원칙에입각하지않은탓도있겠지만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많은 혁신 도시, 기업도시등으로인해사실상전국이 투기장화되고 있는 것도 부동산 가격 상승의결정적인요인이다.

부동산가격급등의폐해는건설명이필요치 않다. 국민의일부만이수혜자일 수밖에없는부동산가격의급등은당장현안이 되고 있는부의양극화를 심화시킬뿐아니

라궁극적으로는주거비용상승에따라임금인상요구로이어지고가뜩이나비싼토지 가격을 상승시켜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경제의 고질적인 구조 문제인 고비용 저효율의 핵심이 바로 비싼집값과땅값인것이다. 더욱심각한문제는단기간내과도한가격상승을수반하는투기바람은언젠가는꺼질수밖에 없는 거품을 불어넣게 됨으로써 금융 불안을 야기할 위험이 도사리고있다는 점이다. 주택과토지를담보로 풀려나간막대한금융대출은부동산거품이빠질경우바로대출부실로이어지기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완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은 반드시 안정되어야 한다. 온나라가투기장화되고온국민이투기에 열중하는 상황에서 경제가 온전하게 굴러갈수는없다. 부동산투기를잡기위해서는세금인상과수요억제책과투기단속, 자금출처조사와 같은행정적인방법에의존하기보다는 획기적인 공급 확대가 가장 효과적인데책이다.

덧어놓고 주택 건설을 늘리기보다는 수요가있는곳에, 수요가있는사이즈의주택공급이이뤄져야가격상승을막을수있다, 시장 원칙에 입각한 대책이라야 효과를 거둘수있다는뜻이다.

또한, 정부의정책기조를분배중시에서 성장 중시로 전환할필요가있다. 경제에서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사전적으로 단정하기어려운문제다. 경제상황에따라우선순위가달라지게된다. 오랜성장중시의개발연대와세계화 등으로소득과부의 양극화, 급격한노령화 추세 등을 감안할때 분배와 복지를 우선하는 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이없는것은아니다.

그러나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갈수록 떨어지고경기가악화되는상황에서지나치게

분배와복지에우선을두는것은정책기조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성장을 통해 경제 규모를 키우지 못할경우나뉘가질 파이도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아직 선진국에 비해 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경제의 능력과 겨우 1만 달러 고지를 넘어선 소득 수준에서감당할수있는정도에서 속도조절이 있어야 한다.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는데 복지비부담만늘어나게되면결국축소균형을피하기어렵다.

냉전 체제 종식 이후 선진국에서는 국방비감축에서생기는여유로복지예산을늘리고있는데 비해우리나라는 복지비와국방비를 동시에 늘려나가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기업과 국민의 조세 부담이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밖에없는상황이다. 외국인투자유치와기업들의투자 활성화를위해세부담을 낮추고획기적인 규제개혁에 나서고 있는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그만큼 불리해지는데셈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건설경기를 살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택건설 활성화와 SOC 확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있다. 특히주택대란으로불릴정도로집값이급등하고있는것을막기위해서라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획기적인 주택 공급확대방안이마련돼야한다. 정부당국자도 실토하고 있듯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요억제측면에서는더이상 나을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 외에 달리 방도가없는것이다.

예측 불허의 복핵 변수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는언제라도위기에 직면할수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견



더낼 수 있는 비상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박시룡
서울경제신문논설장